



행복한 도민, 신뢰받는 의회

충북의정

Chungcheongbuk-do Provincial Council

2017. 9. Vol 248



충청북도의회

<http://council.chungbuk.kr>

가을

그 뜨겁던 녹색의 열정은 기를 잃고
저만치 다가온 가을이 익어간다

청자빛 눈부신 하늘에
피어오른 뭉게구름
바람과 유영하며
천둥 번개로 입은 상처를 달랜다

서늘한 바람 살갓을 스치면
별은 지나간 밤의 아쉬움에
영롱한 아침 이슬로 맺힌다

영혼과 육체 속에 스며드는 풍요는
인고의 세월을 보낸 삶의 모습들을
다듬고

여백 없이 풍요롭게 채웠던 그림은
계절의 순환 속에 또 여울져 갈 것이다

채움과 비움의 아쉬움만 남긴 채



유 제 완

- 문학저널 시동단
- 한국수필 수필동단
- 한국경제신문 기자
- 중부매일신문 업무국장
- 충북경제신문 편집국장
- 청주문인협회 회장역임
- 현 충북문인협회 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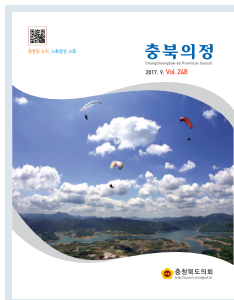
충북의정

Chungcheongbuk-do Provincial Council

2017. 9. Vol 248

Contents

- 04 | 제357회 임시회 주요내용
- 06 | 집중폭우 피해지역 긴급 현장점검 · 복구작업
- 08 | 수해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성명서
- 09 |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민 · 관 협력방안 모색 토론회
- 10 | 제10대 의회 후반기 1년 주요 의정활동 성과
- 12 | 행정안전부 방문 · 을지훈련장 격려
- 13 | 집행부와 간담회 · 우수의정대상 시상
- 14 | 각 위원회 활동상황
- 20 | 주요 처리 의안
- 22 | 5분 자유발언
- 24 | 의회 주요 용어 해설
- 26 | 의정활동 이모저모
- 28 | 세무상식 · 건강상식
- 30 | 의원논단



청풍호

충주댐 건설로 인하여 충청북도 제천시 금덕면, 덕산면, 수산면, 청풍면, 한수면 일대에 조성된 인공호수.

내륙의 바다라고 불릴 만큼 담수량이 커서 소양호 다음으로 규모가 크다.

- 발 행 일 2017년 9월
- 발 행 인 충청북도의회 의장 김양희
- 발 행 처 충청북도의회
- 구독신청 「충북의정」 구독을 희망하시는 도민께서는 상기의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 소 (우.28515)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문화동)
- 전 화 (043) 220-5123 ● F A X (043) 220-5119
- 홈페이지 <http://council.chungbuk.kr>



충청북도의회는 7월 4일부터 7월 14일까지 제357회 임시회를 열어 도정 및 교육시책에 대한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등 20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제357회 임시회 주요내용

충청북도·도교육청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 수해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현실적 피해보상 촉구

충북도의회(의장 김양희)는 7월4일부터 7월 14일까지 11일간 제35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를 열어 도정 및 교육시책에 대한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등 모두 20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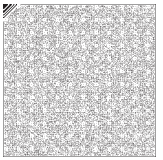
또 비회기 중인 7월 16일 충북 도내 일원에 쏟아진 집중폭우로 초유의 재난·재해가 발생함에 따라 7월 17일 기자회견을 갖고 수해지역의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현실적인 피해보상 대책마련'을 강력히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데 이어 재해·재난지역을 지속적으로 방문하며

침수지역에 대한 복구 작업에 앞장섰다.

도의회는 7월 4일 실시한 제1차 본회의에서 「제35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의결하고 충청북도지사와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은 후 상정된 안건들을 의결했다.

이날 이연구 의원은 '충주시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여 '충주시 의료사각지대 해소 및 집행부의 법 준수'를 촉구했다.

또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보궐선거를 실시, 부의장에는



제357회 임시회 주요처리 의안

- ❖ 충청북도 청남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충청북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감염축 관리 조례안
- ❖ 충청북도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진흥 조례안
- ❖ 충청북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충청북도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안
- ❖ 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충청북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 ❖ 충청북도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충청북도 노사민정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충청북도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충청북도 과학기술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충청북도진로교육원 설치 계획안 등

김인수 의원을, 정책복지위원장에 김영주 의원을, 산업경제위원장에 이의영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는 7월 5일부터 7월 13일까지 소관 부서에 대한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충청북도 청남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해 본회의에 상정했다.

개회 마지막 날인 7월 14일 실시한 제2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비롯한 상정된 안건들을 처리했다.

도의회는 이날 연철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청남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인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감염축 관리 조례안」, 이종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진흥 조례안」, 윤홍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현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안」 등 5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충청북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북도 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충청북도진로교육원 설립 계획안」 등 20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어 임희무·이광희·엄재창·장선배·이양섭·임병운 의원이 △자연재해 미리 대비하여 인재를 줄이자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수가 현실화 촉구 △자치단체 소멸 시대에 대비하자 △영구임대주택 입주민 삶의 질 향상 시책 적극 추진해야 △진천 스포츠테마타운 조성과 한국체육대학교 진천 이전 촉구 △재의요구 제도의 부당성 및 개선 촉구 등을 주제로 각각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김양희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제10대 의회 후반기가 ‘도민행복’을 최고의 가치로 ‘열린 의회’를 표방하며 출범한 지 1주년이 되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도민과 함께하는 ‘민생 의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도의회, 폭우 피해지역 긴급 현장점검·복구작업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피해주민 및 관계자 격려



충청북도의회는 7월 17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7월 16일 청주·괴산·보은지역에 내린 초유의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조속한 복구계획과 보상대책 수립을 요구하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충청북도의회(의장 김양희)는 지난 7월 16일 시간당 90mm가 넘는 폭우로 충북지역 곳곳이 침수되고 도로가 통제되는 등 폭우 피해지역이 광범위하게 발생함에 따라 긴급회의를 갖고 이의영 산업경제위원장, 임병은 의회운영위원장 등 도의원과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함께 피해지역을 찾아 현장점검에 나섰다.

도의회는 이날 김양희 의장을 필두로 도의원들과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함께 범람위기에 놓인 청주시 명암동 명암저수지를 점검하고 오송지역의 농경지 침수 피해현장을 시찰한데 이어, 침수로 인해 교통 통제 중이던 오송역 부근의 지하차도 등을 방문하여 지역 주민과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특히, 오송읍 봉산리 침수 주택가를 방문해 물이 찬 골목과 부엌까지 일일이 확인하고 주민의 불편사항을 청취하며 도의회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위로했다.

또한 7월 17일 집중호우로 충북도내 곳곳이 큰 피해를 입은데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어, 18일부터는 청주시 오송·모충동·미원 등의 수해지역과 괴산군, 보은군 지역의 수해현장을 찾아 다니

며 봉사의 손길을 펼쳤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도의원과 의회사무처 직원들은 비닐하우스 내 피해 작물 제거, 주변 토사물 제거 및 청소 등 피해 주민들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복구 작업을 돕는 한편, 걱정과 시름에 잠겨 있는 피해 주민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전했다.

도의회는 각 상임위원회별로도 수해현장과 피해 농가를 방문해 봉사활동을 펼치고 주민들을 위로했다.

각 상임위원회는 위원회별로 조를 짜서 청주 오송·미원 일원과 괴산군과 증평군 일원에서 꽃묘장 주변, 쏘가리 양식장, 유실 하천 등의 수해 및 침수현장을 방문·확인하고 배수로 정비와 농경지에 쌓여있는 부유물과 토사 퇴적물 등을 집중 제거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도의회는 호우피해를 입은 도민들을 위로·격려하는 일에도 앞장섰다.

도의회는 7월 25일 수재의연금 504만원을 모금해 도청 민원실 앞에 마련된 (사)전국재해구호협회 성금 접수처에 전달했다. 이날 성금은 도의원과 사무처 직원이 적극 동참한 가운데 십시일반으로 모았다.

또한 도의회는 7월 27일 정부가 지난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지역인 청주시와 괴산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한데 대해서 즉각적인 환영 입장을 밝히는데 이어 7월 28일 ‘보은·진천·증평 특별재난지역 추가지정 및 수재민 생활안정 지원 대책 건의문’을 채택하고 “이번 수해로 큰 피해를 입고도 특별재난지역 지정에서 제외된 증평·진천·보은군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도 정부의 재검토를 통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청주시와 괴산군 뿐 아니라, 이번 수해로 큰 피해를 입은 가운데 전국 각지의 도움 속에 온 군민이 수해 복구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증평·진천·보은군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도 반드시 뒤따라길 염원하며,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도의회에서도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도의회는 이번 수해와 관련, 자치법규를 일제정비하여 재난 피해를 입고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도민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우선 ‘특별재난지역’과 ‘자연재난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제외되는 재해지역과 주민들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자치법규 보완 및 정비에 나선다.

도의회는 이를 위해 도의회 차원에서 재난관련 법령과 타 자치단체 자치법규 검토를 통해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사회재난까지 대비한 자치법규를 마련 중에 있으며, 특히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집행부 소관부서와 협의하여 도민들에게 실질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9월 임시회 중에는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재해의 원인 규명과 대책마련을 위한 ‘재난관리 정책 토론회’를 개최해 해당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재난으로 인해 도민들이 실의에 빠지지 않도록 정책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충북에 내린 집중폭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보은·진천·증평 특별재난지역 추가지정·생활안정 대책 요구

7.16일 집중호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성명서

충청북도는 올 봄부터 지난 달 말까지 이어졌던 극심한 가뭄에 이어 지난 7월 16일에는 기습 폭우로 인해 청주시를 비롯한 6개 시·군의 주택, 상가, 공장 등이 침수되는 등 충북 사상 초유의 재난 피해를 남기고 갔다.

현재까지 조사된 피해상황으로는 많은 인명피해와 주택, 농경지, 도로침수·유실, 가축피해 등의 엄청난 재산피해가 발생했으며, 앞으로도 정밀조사가 이루어질 경우 그 피해액은 눈덩이처럼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 시·군별로 이재민들에 대한 응급지원과 긴급인력·장비를 동원해 응급복구를 추진하고 있지만 갑작스럽게 엄청난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어디서부터 손을 데야 할지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형편으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충청도민들이 삶의 희망을 갖고 생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루속히 청주시를 포함한 피해지역에 대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여 이재민들의 아픔을 달래주고 희망을 주어야 할 것이다.

이에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은 정부가 집중폭우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여 해당지역을 하루속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여 복구에 힘을 실어줄 것을 충북도민과 함께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정부는 이번 집중 폭우로 인해 엄청난 피해를 입은 청주시를 포함한 피해지역에 대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조속한 피해보상과 복구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정부는 수해로 실의에 빠진 수해민들이 피해의 충격을 극복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피해 보상책을 강구하라.

2017년 7월 17일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

보은·진천·증평 특별재난지역 추가지정 및 수재민 생활 안정 지원 대책 건의문

지난 16일 집중적으로 내린 폭우로 인해 충청북도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청주·괴산뿐만 아니라, 보은(33억 3100만원), 진천(38억 400만원), 증평(40억6200만원)도 막대한 재산피해를 입고 지금까지도 소중한 생활터전의 재건을 위해 하루하루를 악전고투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발빠른 특별재난지역 지정으로 청주시와 괴산군은 가까스로 한숨을 돌렸지만 제외된 보은·진천·증평군은 기초자치단체가 가진 한계와 재정적 부담 속에 온 군민이 깊은 허탈감과 상실감 속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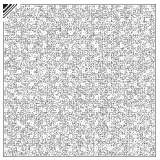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대해 피해지역의 범위와 실정에 일치하지 않는 법률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지정과 지원제도의 미비점들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히신 바 있습니다.

이에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은 충북도민의 아픔과 상처, 눈물들을 한 줄기 희망의 빛으로 바꿔줄 수 있는 보다 현실적인 조치를 도민과 함께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하나, 수재민의 생활안정과 신속한 수해복구를 위해 금번 특별재난지역 지정에서 제외된 보은·진천·증평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현행 제도상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어렵다면 이에 준하는 동등한 보상과 복구 지원책을 마련해 주시고, 기존의 관행적인 차원이 아닌 수재민과 지역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충분한 수준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7월 28일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



마을공동체 활성화 위한 민·관 협력방안 모색 토론회

중장기 계획 · 지원기구 구성 등 협력 강화 행정내부 업무 총괄 부서 설치 선행 되어야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7월 11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충청북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공동으로 ‘충청북도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하고 지역(마을) 공동체 여건과 추진방향 및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12월 제정한 「충청북도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에 대한 후속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토론회를 통해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과 이를 지원할 거버넌스 기구 구성 등 여러 정책과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고 바람직한 마을공동체 구현과 민·관 협력 체계 구축을 꾀했다.

송재봉 충북NGO센터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회는 김종호 서울마을공동체지원센터 대외협력관이 ‘마을공동체 민관협력 현황과 과제’를 주제 발표했다. 김 대외협력관은 발제를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정책으로의 제도와 조건 만들기과 광역에서 기초로 정책과 예산집행의 권한과 책임 이양, 지속가능한 민·관 협치 전달체계 제도와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연철흠 충청북도의회 의원과 한인섭 중부매일 부국장, 박양규 진천군의회 부의장, 박완희(사)두꺼비친구들 상임이사, 송준숙 충주시마을만들기추진협의회 총괄, 변혜선 충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선희 충북도 민간협력봉사팀장이 패널로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연철흠 의원은 “충북도에서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부서는 자치행정과인데, 직원 혼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균형개발과, 건축문화과, 경제정책과 등 각 실국에서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관련한 업무를 각 개악진식으로 진행하고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인섭 부국장은 “조례 제정 이후 행정내부의 업무를



행정문화위원회는 7월 13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충북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력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총괄할 통합부서 설치 여부 등 마을공동체 사업 지원 역할을 할 행정 내부의 교통정리가 선행되어야 하며, 가칭 ‘마을공동체활성화위원회’와 행정, 그리고 현장인과 민간사이 가교역할을 할 중간지원조직 구성이 시급하다며 “향후 지속적인 의견수렴과 조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변혜선 선임연구위원은 “마을공동체의 최종 목적은 자립가능한 마을”이라고 강조하며, “마을에 필요한 사업의 발굴, 마을 주민과의 협업, 마을의 지속가능한 미래 구성 등 마을 현장에서 마을 주민과 마을을 만들어가는 중간지원조직의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선희 민간협력봉사팀장은 “마을공동체 사업 관련 제도와 사업기획·조정, 지원 등의 역할을 담당할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고, 충청북도에 1과 3팀(16명), 시·군에는 1팀(4명) 정도의 부서를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이와 같은 방안을 조직전담 부서와 협의해 전담부서가 신설되면 마을만들기 추진 전략과 세부사업, 사회적 기업 및 마을기업을 포함한 모든 공동체 사업을 총괄 지원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충청북도는 2018년 하반기에 마을만들기 사업 중간조직인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현장 구석구석 누비며 “지역현안 해결 적극 노력”

견제와 감시기능 강화로 도민의 뜻 적극 대변

지난해 7월 출범한 제10대 하반기 충북도의회가 도민과 소통하는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며 1년을 맞았다.

도의회는 하반기 1년 동안 ‘행복한 도민 신뢰받는 의회’를 의정목표로 도민의 목소리를 낮은 자세로 경청하며 책임 있는 견제·감시를 통해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또한, 하반기 도의회는 첫 민생현장으로 지적장애인 강제노역 피해자와 가족을 방문해 위로하고, 청주 네

쌍둥이 부부 축하 방문과 무료급식소 봉사, 도내 폭염 피해 축산농가 현지 확인, AI와 구제역 방역 현장 방문 등을 실행하며 늘 도민 곁에서 함께 하는 의회상을 정립하는데 힘써왔다.

특히 여성으로서는 충북도의회 사상 최초로 하반기 도의회를 이끌 수장으로 선출된 김양희 의장은 민생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여성의 섬세함’과 ‘어머니의 강인함’으로 도내 생활현장 구석구석을 발로 뛰며 살피겠다는 호평을 들었다.

입법활동 역량 강화

도의회는 지난 1년 동안 정례회 2회, 임시회 7회를 포함해 총 9회, 129일의 회기를 내실 있게 운영했다.

도의회는 그동안의 회기를 통해 지역 균형발전 및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 조례안 121건, 건의문·결의문 13건 등 총 216건의 의안을 처리했다.

이는 제9대 의회에서 같은 기간 처리한 125건에 비해 대폭 증가한 수치로 제10대 하반기 도의회가 의정활동의 목표와 방향을 어디에 두고 실천해 왔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특히 이 기간에 처리한 안건 중 ‘충청북도 미세먼지 정보에 관한 조례안’과 ‘충청북도 체육진흥 조례안’, ‘충청북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도민 생활과 직결된 의원발의 조례도 63건에 달했다.

이는 도의회가 입법 활동과 입법 역량 강화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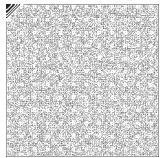
현안 해결에 주력

도의회는 이와 함께 ‘KTX 세종역 신설 백지화 촉구 건의문’ 및 ‘항공정비산업점검특별위원회 구성 결의문’, ‘쌀값 폭락에 따른 대책 마련 촉구 대정부 건의문’ 등 충북 미래성장과 도민 생활과 직결된 지역 현안 해결에 적극 노력하는 한편, 이에 대한 강력한 도민의 뜻과 의지를 중앙부처 등 관계기관에 전달했다.

특히 KTX 세종역 신설 백지화를 위해 도의회는 여·야 구분 없는 초당적인 협력과 인접한 충남도의회와의 공조 체계 강화 등을 통해 도정 역량을 하나로 결집시키는데 크게 기여했다.

이와 함께 지역 현안과 사회적 이슈를 심층 분석한 대집행부 질문 52건, 5분 자유발언 41회 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와 고충을 전달하고, 이를 도정에 반영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도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도 활발히 수행했다.





■ 견제 · 감시기능 강화

도정과 교육시책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질타와 비판에 치중하기보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잘 된 시책에 대해서는 격려하는 등 실질적인 감사를 통해 시정요구 92건, 건의사항 220건 등 총 312건을 문제 제기하며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정책적 환류를 통해 지역 성장과 발전에 시너지 효과를 주는 행정사무감사의 환경 조성에도 최선을 다했다.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서도 예산의 적정성과 효과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로 예산이 전 도민을 대상으로 적재적소에 배분될 수 있도록 조정하며 열악한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에 심혈을 기울였다.

■ 현안진단 · 대안모색

또한 도의회는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토론회’, ‘청주에어로폴리스 및 MRO산업 발전방안 모색 토론회’, ‘충청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정 토론회’ 등을 개최하며 각종 현안에 대한 진단과 정책대안을 모색하고 취약계층 보호에 대한 제도 개선 및 사회적 공감대 확산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특히 도민들에게 큰 걱정과 우려를 안겨줬던 MRO사업에 대해서는 유치 실패라는 패착의 과정을 빠짐없이 점검해 공론화하여 집행부에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향후 후유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함으로써 책임지는 집행부의 모습을 이끌어냈다. 이를 통해 모든 정책의 집행과 평가의 최종 결정권이 도민에게 있음을 확실히 보여주는 등 도민의 뜻을 받들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 소통강화 · 정책연구

도의회는 본회의에 이어 상임위원회까지 HD디지털 인터넷방송을 확대 시행하여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의안 표결에 전자투표 시스템 도입을 통해 정책결정 과정의 투명성 및 책임성도 제고하고자 노력했다. 도의회가 의정모니터 운영과 ‘행정사무감사 도민 제보의 방’ 운영 등 도민 참여 확대와 도민 제안 활성화에도 많은 노력을 해온 점도 주목할 만하다.

제2충북학사 건립부지 현지 확인 및 사드 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청주국제공항을 방문해 항공사 재정지원 확대와 노선 다변화 등을 논의하는 등 현장 중심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벌인 것도 눈여겨볼만한 대목이다. 도의회

는 이를 통해 ‘현장을 발로 뛰며 현장에서 답을 찾는 의회’를 실천함은 물론, 의정학술연구도 7건을 실시하는 등 ‘정책을 연구하고 생산하는 의회’ 환경 조성에도 애썼다.

■ 국제교류 · 지방분권 강화

대외적으로는 러시아 연해주 의회와 교류협력을 체결하여 과거 중국에 상당 부분 편중되어 왔던 국제교류의 다변화를 꾀하고 한-러 지역의 미래지향적 상생 · 발전을 위한 협력관계 구축을 공고히 했다.

이 밖에도 도의회는 행자부 장관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보좌관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 관철, 지방분권 강화 및 지방자치의 성숙 · 발전을 위한 공동 현안 해결에 타 시 · 도의회와 긴밀하게 협조해 왔다.

이처럼, 후반기 출범 1년 동안 도의회는 정책 중심의 의회 운영을 통해 도민의 뜻을 올바르게 섬기는 민의의 정당 구현과 함께 각종 현안 해결의 물꼬를 트고자 노력해 왔다.

■ 소회 · 의정 각오

취임 1주년을 맞은 김 의장은 “그동안 어렵고 힘든 시기와 기쁘고 보람찼던 순간들이 함께 교차하지만, 도의회에 부여된 사명과 책임을 가슴 깊이 새기면서 도민행복과 충북발전을 위한 여정에 든든한 한축, 그리고 이음새가 되고자 노력했다”면서 “앞으로 여 · 야 화합에 기초한 의회 운영과 도민과의 소통 강화를 통해 도민에게 진정으로 ‘힘이 되고 의지가 되는의회’로 더욱 발돋움해 나가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또 “제10대 충북도의회는 향후 의정활동이 도민들 곁에서 늘 함께하며 알찬 결실을 맺어갈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의 격려와 질타, 관심과 사랑을 지속적으로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도의회, 행정안전부 방문 김부겸 장관과 면담

보은·진천·증평 특별교부세 지원 당부

충북도의회는 8월 4일 김양희 의장과 엄재창·김인수 부의장이 함께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김부겸 장관을 면담하고 충북 수해지역에 대한 신속한 수해복구와 피해 지원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날 행정안전부장관 면담은 7월 28일 도의회가 행정안전부에 전달한 ‘보은·진천·증평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 및 수재민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 대책 건의’에 이은 조치로, 집중호우로 인해 청주·괴산과 함께 큰 피해를 입고도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제외된 보은·진천·증평에도 특별재난지역에 준하는 수준의 특별교부세 122억 원을 지원해 달라고 촉구했다.

또, 공동주택 침수의 경우 이재민 지정 및 피해복구 대상에서 제외되는 불합리성과 미비점이 나타난 만큼 해당 법령을 현실에 맞게 개선·보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별재난지역에서 제



충청북도의회 김양희 의장과 엄재창·김인수 부의장이 8월 4일 행정안전부장관을 면담하고 신속한 수해복구와 피해지원 대책마련 등을 건의했다.

외된 보은·진천·증평 지역은 재난안전특별교부세 및 행정안전부특별교부세를 통해 법령안에서 최대한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하며, “공동주택 침수의 경우도 관련 법령의 재정비를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17년도 을지연습’ 종합상황실 격려 방문

도민의 안전을 위한 통합방위태세 확립 당부



충북도의회는 8월 22일 ‘2017 을지연습’이 진행 중인 충무시설 종합상황실을 방문해 현황을 듣고 훈련 중인 공무원, 군인, 유관기관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위문품을 전달 했다.

“도민 앞에 여야 없다” 충북사랑은 한마음

도의회 제안, 道 집행부와 소통의 시간 가져



충청북도의회는 7월 14일 청주시 서문동 삼겹살 골목 한 식당에서 이시종 도지사와 간부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실시했다.

충청북도의회는 7월 14일 제10대 의회 후반기 2년차 의장단 · 상임위원장단이 구성됨에 따라 김양희 의장, 김인수 부의장, 임병은 의회운영위원장, 임희무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이시종 충청북도지사와 간부공무원을 초청

해 청주시 서문동의 한 식당에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도의회 김양희 의장의 초청으로 열린 이번 간담회는 ‘충북발전과 도민행복’을 위한 민선6기 도정시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도록 도의회와 집행부가 지혜를 모아 KTX 세종역 신설 저지, 문장대온천개발 저지, 지방분권 개헌 실현 등 당면한 충북의 현안들을 수시로 머리를 맞대고 함께 풀어 나가고자 하는 의미로 마련됐다.

도의회는 간담회 자리에서 “충북발전과 도민 앞에 여·야 없다”고 밝히며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다가올 4차 산업혁명 등의 변화에 공동 대응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도의회 차원에서도 충북발전의 주춧돌이 될 ‘6대 신성장 산업’ 선점을 위한 정부예산 확보와 전국체전과 제천한방·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 등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윤홍창·최병윤·임병은 의원 ‘우수의정대상’ 수상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에 기여한 노력 결실



충청북도의회 윤홍창·최병윤·임병은 의원이 7월 17일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주최한 ‘제4회 우수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충청북도의회(의장 김양희)는 17일 대전 호텔ICC에서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주최하는 ‘제4회 우수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임병은·윤홍창·최병윤 의원이 각각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에 수상한 ‘우수 의정대상’은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도의원들을 대상으로 집행부에 대한 견제, 정책대안 제시, 주민행복 제고를 위한 입법활동 등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사향을 엄격히 심사해 수여하는 가장 영예로운 상이다.

윤홍창 의원은 지역현안과 교육발전을 위한 재정운영 건전성 제고와 교육현장의 학생폭력예방, 교권침해에 대한 대안제시, 충북도 대규모 현안사업의 꼼꼼한 점검등 교육정책개선과 지역현안 해결에 기여했다.

최병윤 의원은 ‘충청북도 도민참여 기본조례’, ‘충청북도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을 제정하고, 어긋난 법과 절차 등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에 기여했다.

임병은 의원은 ‘충청북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 세계무예마스터십 대회 로드맵 제안, KTX세종역 신설 저지, 청와대 국회분원 오송유치 등의 도정비전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의회운영위원회

제357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의결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임병운)는 제35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첫 날인 지난 7월 4일 제1차 위원회를 열어「충청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동의의 건」등을 심사·의결하고, 의회사무처 소관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았다.

먼저, 「충청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한 심사에서는 1년씩 상설로 구성·운영하고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해 예산결산 심사업무의 계속성을 유지해 나가고 심사기능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도의회의 예산통제 기능을 강화해 도민들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안되었다.

결의안의 주요골자는 ‘지방자치법 제56조’와 ‘충청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충청북도의회에 제출되는 충북도와 도교육청의 예산 및 결산 등에 대한 종합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두고 특위 위원수를 13인 이내로 하며 임기는 위원 선임일로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활동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했다.

이어 진행된 의회사무처 소관 ‘2017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상황’ 보고에서 김진형 의회사무처장은 “금년도에는 도민에게 행복을 주는 앞서가는 선진의정 실현과 신뢰받는 의회상 구현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견제와 협의로 균형 있는 의정운영 추진 등 5대 중점시책 추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왔다”며 “앞으로도 의정활동 지원이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아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의영 의원은 러시아 연해주, 중국 흑룡강성·광서장족자치구·길림성, 베트남 빈푹성 등 해외 우호협력 도시와의 교류협력 추진상황을 의회사무처장에게 자세히 질의하고 답변을 들은 후, 향후 해외 우호협력 도시와의 교류협력 사업이 한층 더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줄 것과 베트남의 경우 빈푹성 뿐만 아니라 하노이 등 경제적 활동이 활발한 지역을 새롭게 개척해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위원회는 또 오는 8월 29일부터 9월 11일까지 14일간 제35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를 열기로 하고, 충청북도와 충청북도교육청이 제출한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을 심사하기로 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7월 4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동의의 건'과 기타현안들을 협의했다.

정책복지위원회

제357회 임시회

중부권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에 만전 촉구



위원장
김영주 의원



부위원장
이양섭 의원



이광희 의원



박우양 의원



박종규 의원



윤은희 의원



정책복지위원회는 7월 11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소관부서로 부터 상정된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청취했다.

정책복지위원회(위원장 김영주)는 제357회 임시회 기간 중인 7월 11일부터 이틀간 위원회를 개최해 7개 소관 부서 및 기관의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충청북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서 이광희 의원은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한 5분 자유발언 내용의 추진 상황을 질문하며 복지충북 실현을 위해서는 사회복지사의 처우가 안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전국 수준으로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윤은희 의원은 아동상담사 인력충원 계획을 질문하며, “충북아동보호전문기관의 관리아동수는 평균 15명이 이상적인데 현재 관리아동수는 평균 48명으로 나타나고 있어 아동상담사 증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설명하며, “인력충원에 최선을 다해 주고 중부권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박종규 의원은 “기초생활 맞춤형 급여기준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고, 장애인생산물 판로개척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홍보와 어린이집 순회영양사 활용에 대한 제도적 취지와 목적을 도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영주 의원은 “충북여성재단이 여성정책 연구·교육의 허브기능 등을 수행하기 위해 출범한 만큼 지역의 여성인재 양성, 현장 맞춤형 여성정책 개발·지원, 여성·가족을 위한 정책·연구개발, 성주류화 확산을 위한 제도 연구 등을 타 시·도보다 발전적으로 추진해 여성가족친화도 충북을 선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양섭 의원은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사업비 집행행위가 저조하다”고 지적하며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어린이집의 아동학대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바, 철저한 지도·점검으로 이러한 사건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우양 의원은 “일자리를 원하는 노인들이 많은데 이에 대한 수요가 마련되도록 적극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노인학대 사건사고가 아직도 발생되고 있는 바, 한시적 점검이 아닌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장애인 인권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구했다.

행정문화위원회

제357회 임시회

충청북도 청남대 운영 조례 등 일부 개정



부위원장
연철흠 의원



김학철 의원



박봉순 의원



박한범 의원



이언구 의원



최병윤 의원



행정문화위원회는 7월 11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행정국에 대한 '2017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기타 현안들을 처리했다.

행정문화위원회는 제357회 임시회 기간 중 위원회를 열어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충청북도 청남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했다.

먼저, 연철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청남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는 청남대가 2003년 이후 국민에게 개방 된 후, 누적관람객이 1천만 명을 넘어서 우리도의 대표관광지로 자리매김함에 따라 관람객 불의의 사고 예방을 위해 의무실 설치와 인력을 배치 할 수 있는 내용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했다.

위원회는 또 '2017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으며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했다. 먼저 김학철 위원장은 “공보관실 소관 광고홍보강화 예산 약 18억 원에 대해 향후 행정사무감사에서 집중 점검 할 것”이라며 “해당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중간 점검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연철흠 의원은 “현재 각 시·군에서 전국체육대회를 대비해 관련 체육시설을 개·보수하고 있다”며 “이 같은 시

설을 이용하는 선수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과 국제대회 규격에 맞도록 설계단계부터 면밀히 검토해 시행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봉순 의원은 “제2충북학사 건립과 관련하여 학생들을 위한 체육시설 설치가 불필요하다는 충북도의 일부 견해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충북학사는 학생들이 사용하는 시설인 만큼 학생들 의견이 설계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한범 의원은 “도지사 공약사항 중 하나인 ‘감사합의제’가 정상추진이라고 공표되고 있다”면서 “감사위원회 구성 운영도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정상추진이나”고 지적하며, 이는 정상추진이 아닌 공약 미이행으로 보는 것이 당연하다고 질타했다.

이언구 의원은 “충청권유교문화권 관광 활성화, 법주사 관람료 폐지, 스포츠어코드 등 최근 충청북도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하는 사업들이 도의회와 사전협의도 없이 언론에 공표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사업추진 시작 단계부터 도의회와 집행부가 협치 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주문했다.



산업경제위원회

제357회 임시회

농·축산물 홍보 및 소비촉진에 앞장 설 것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이의영)는 제357회 임시회 기간 중 ‘2017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충청북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감염축 관리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심사·의결했다.

위원회는 7월 10일 경제통상국, 경제자유구역청,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농업기술원에 대한 ‘2017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무분별한 태양광 발전 사업으로 인한 유해 전자파 발생, 빛 또는 열 발생에 의한 과수농가 피해 등 지역별로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조속한 대책마련을 당부했다.

이어, “충청북도가 추진하는 생산적 일손지원 사업에 있어 농촌에서는 농업분야 전문가를 원하고 있지만 비숙련자가 이 사업에 참여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며 농가 의견수렴 후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하고 「충청북도 노사민정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원안대로 가결했다.

또 산업경제위는 7월 11일 농정국, 충북신용보증재단,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충북테크노파크에 대한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했다.

위원들은 이날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며 지방자치단체 소멸과 관련하여 일본의 ‘마스다 보고서’를 언급하며 “지방자치단체 소멸을 대비하기 위해 젊은 세대와 여성 농업인이 정주하며 지방자치단체 소멸을 예방할 수 있는 정책을 펴 달라”고 주문하고 “최근 귀농·귀촌 활성화로 인해 원주민과 귀농·귀촌인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데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에 관한 금지에 관한 법률」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축산물의 정기적인 수요처 확보를 통한 대기업과의 공급협약 내역을 묻고, 어려운 농업·농촌을 위해 농축산물 홍보와 소비촉진에 앞장 서 달라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또, 「충청북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감염축 관리 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했다.

본 조례안은 가축전염병 예방과 발생 시 조기종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가축전염병 관리대책 수립을 위한 도지사 책무와 가축소유자 책무 규정,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각종 사업 지원 등을 포함했다.

위원장
이의영 의원부위원장
황규철 의원

김인수 의원



엄재창 의원



임병운 의원



임희무 의원



산업경제위원회는 7월 10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2차 위원회를 열어 경제통상국으로 부터 2017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았다.

건설소방위원회

제357회 임시회

제천국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 현장 점검



위원장
임순묵 의원



부위원장
이광진 의원



강현삼 의원



김봉희 의원



박병진 의원



장선배 의원



건설소방위원회는 7월 12일 '2017제천국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조직위'를 방문해 엑스포 전시 구성, 홍보, 기업 유치 등 추진상황을 보고 받았다.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임순묵)는 제357회 임시회 기간 중 위원회를 열어 소관 부서에 대한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2017제천국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 등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지방문 등을 실시하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위원회는 지난 7월 12일 '2017제천국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 현장을 방문해 관계자로부터 엑스포 전시 구성, 홍보, 관람객 및 기업유치 등에 대한 현황과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엑스포 행사장의 주요동선, 주차장 규모, 시설물 배치 등 그동안 추진돼온 각종 시설물들을 직접 둘러보며 준비상황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조직위원회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한 뒤 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2010년 한방엑스포 성과를 계승하고 그동안 다져온 한방산업의 가시적인 성과를 여과없이 보여주기 위해 7년만에 개최되는 행사인 만큼 국내외적으로 제천한방바이오산업의 우수성을 다시 한 번 증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임순묵 위원장은 "엑스포 행사기간 중인 10월은 최

장 열흘 가까이 계속되는 연휴가 있어 많은 관람객이 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관람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행사운영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며 "엑스포에 참여한 기업들이 팔목할만한 수출계약 성과를 거두고 관람객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콘텐츠를 구성해 두 마리의 토끼를 함께 잡을 수 있는 성공적인 행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7월 13일 실시한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에서는 해당 각 실·국·본부별로 주요 현안 사업들이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지 꼼꼼히 따지며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주요 쟁점사항으로는 다목적 소규모 저수지 실효성에 대한 검토, 화재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의 면밀한 원인 분석과 예방·홍보활동 강화, 중원문화권 개발사업 부진에 따른 정부차원의 지원 요청, 대민 서비스 향상을 위한 소방공무원 인력 충원, 최근 사회적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졸음운전에 대한 도내 대중교통 전수 점검, 중부내륙철도 이천~충주구간 공기 내 준공 요구 등을 집중 질문하고 각 사안별로 시정 및 개선을 요구했다.



교육위원회

제357회 임시회

행복교육지구 사업 교육청·지자체 협업추진 촉구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정영수)는 제357회 임시회 기간 중인 7월 5일 제1차 교육위원회를 열어 충청북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의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현안을 처리했다.

또한, 「충청북도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 진흥 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안」, 「충청북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북도진로교육원 설립계획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했다.

먼저 이종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 진흥 조례안」 심사는 충청북도 내 초등학생의 수상 위기상황에서의 대처능력 향상을 위해 수상 위기상황 시 자기 구조법 등 생존수영 교육을 진흥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했다.

또 임현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안」 심사는 미세먼지 유해성에 대한 인식과 대처역량 강화를 통해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도록 미세먼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했다.

이어, 윤홍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는 충청북도 교육행정협의회 위원 중 위촉하는 위원에 대해 교육감과 도지사가 추천하는 위원 수를 동일하게 하고 위원의 연임규정 마련과 정기회시기를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했다.

위원회는 또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북도진로교육원 설립 계획안」과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상황 보고의견」 등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했다.

심사과정에서 정영수위원장은 “충북행복교육지구 사업에 대해 교육청과 지자체간 소통이 부족해 각자 맡은 역할 정립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교육청과 지자체가 서로 책임감을 갖고 협업하여 사업을 진행해 달라”고 집행부에 당부했다.

아울러, 윤홍창 의원, 이숙애 의원, 최광옥 의원, 이종욱 의원은 2017상반기 주요업무 보고와 관련하여 신규교사의 특정지역 배치, 교권침해 증가에 대한 문제점 등을 집중 질문하며 개선방안과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위원장
정영수 의원



부위원장
이종욱 의원



윤홍창 의원



이숙애 의원



임현경 의원



최광옥 의원



교육위원회는 7월 14일 2017년 9월 개원 예정인 (구)주성중학교에 위치한 충청북도진로교육원 공사 현장을 방문해 현황을 보고 받고 현장을 점검했다.



현 장 중 심 의정을 펼치겠습니다

[제357회 임시회 주요처리 의안]

충청북도청남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연철흠 의원)

[제안이유]

- 대통령 별장이었던 청남대는 2003년 국민에게 개방되어 누적 관람객이 1천만 명을 넘어서는 등 충청북도를 대표하는 명소가 되었음. 증가하는 관광객의 안전에 대비하여 의무실을 설치

[주요내용]

- 의무실 설치 및 인력 배치
-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자구 수정

충청북도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진흥 조례안

(대표발의 : 이종욱 의원)

[제안이유]

- 충청북도 내 초등학생의 수상위기사황 에서의 대처능력 향상을 위하여 수상위기사황 시 자기구조법 등 생존수영 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주요내용]

- 생존수영교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 마련과 시행을 교육감의 책무로 함
- 생존수영교육 계획 수립
- 생존수영교육 시설 확보
- 생존수영교육 시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예산지원

충청북도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안(대표발의 : 임헌경 의원)

[제안이유]

- 미세먼지의 유해성에 대한 인식과 대처역량 강화를 통하여 학생과 교직원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조성을 위해 미세먼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주요내용]

- 미세먼지 관리를 통한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교육감의 책무로 함
- 미세먼지 관리계획 수립 및 측정 및 결과 조치에 관한 사항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 : 충청북도교육감)

[제안이유]

- 충청북도진로교육원 및 충청북도특수교육원 신설과 충청북도 학생외국어교육원 기능 및 명칭을 변경하고자 관련 조항을 신설·조정하고, 본청과 직속기관의 기능을 일부 조정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주요내용]

- 충청북도교육과학연구원 진로지도 교육 삭제 및 수학·발명·생태환경 교육 추가
- 충청북도학생교육문화원 주소지 수정 및 업무 조정 등

충청북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감염축 관리 조례안

(대표발의 : 김인수 의원)

[제안이유]

- 가축전염병 예방과 발생시 조기종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피해를 최소화

[주요내용]

- 가축전염병 관리대책 수립을 위한 도지사 책무와 가축전염병 예방과 축사 소독 등 가축소유자 책무 규정
- 가축전염병 예방 및 조기발견·신고체계 구축 등 관리대책 수립 등

충청북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윤홍창 의원)

[제안이유]

- 충청북도 교육행정협의회 위원 중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 교육감과 도지사가 추천하는 위원 수를 동일하게 하고 위원의 전문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연임규정을 마련하며, 정기회 시기를 조정

[주요내용]

- 협의회는 공동의장 2명을 포함한 14명 이내의 위원으로 변경
- 위촉직 위원은 충청북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도의원 2명, 교육행정 및 교육·학예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 2명, 도지사 2명 이내로 추천하는 것으로 변경
-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 등

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 : 충청북도지사)

[제안이유]

- 도정 각 분야에서 자문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도정 정책자문단을 행정수요에 맞추어 운영

[주요내용]

- 자문단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분과 위원회 명칭 개정
- 조례의 유효기간 연장

충청북도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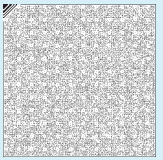
(제출 : 충청북도지사)

[제안이유]

- 신청대상 직종이 다양하고 매년 신청자가 다른 상황에서 종전 위촉된 심사위원의 직종으로 전문적·체계적인 심사가 어렵고,
- 취소 사유 발생 시 그 의결에 따른 심사위원의 소집 부담을 덜고자 임기를 명장이 선정됨과 동시에 해촉 되는 것으로 개정

[주요내용]

- 심사위원의 회소집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취소" 삭제
- 위촉 위원의 임기(2년 연임)을 "위원회의 심의의결 후 도지사의 명장 선정이 있음과 동시에 해촉된다."로 함



충청북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 충청북도지사)

[제안이유]

- 장애인 학대의 신고접수, 현장조사, 응급조치, 사후관리 등의 다양한 제반업무 수행을 위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을 민간에게 위탁

[주요내용]

- 위 치 : 충청북도 내
- 위탁기간 : 위·수탁 협약일로부터 3년
- 수탁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장애인 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 ※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가 충청북도에 소재 (분사무소의 경우, 사무실 및 대표자가 있을 것)
- 선정방법: 공개모집
- 사업비: 95백만원(국비 50%, 도비 50%) ※ 2017.8.~12.까지
- 주요사무
 - 장애인학대의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 피해장애인 그 가족, 장애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
 -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장애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설치·운영 등

충청북도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 : 충청북도지사)

[제안이유]

- 자치단체 금고 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행자부 예규)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도 금고를 지정·운영

[주요내용]

- 회계 및 금고관리 법령 변경
 - 「지방재정법」 관련 인용조항을 「지방회계법」으로 변경
- 불합리한 수의방식 금고지정 기준 삭제
 - 경쟁에 의해 지정된 금융기관에 대하여 1회 한해 수의계약 규정 삭제
- 총 금고의 수를 2개로 제한
- 금고 약정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개정
- 협력사업비 집행 내역 공개 범위 지정 조문화
 - 사업비 총액, 세입예산은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시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출 : 충청북도지사)

[제안이유]

- 신규 위임사무의 반영과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위임권한 변경, 기존 위임 사무를 근거 법령 및 법조항 순서에 맞게 일제 정비

[주요내용]

- 사무처리 효율화를 위한 시장·군수 위임사무 신설
 - (환경정책과) 석면안전관리에 관한 사무(5건)
 - (수질관리과) 물놀이행 수경시설 신고 및 관리 등(2건)
- 법령에 따른 권한이양 : 도지사→시장·군수
- 국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법 조항 폐지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 : 충청북도지사)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일부개정(2016.12.26.)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도록 조례 개정

[주요내용]

- 토석채취료 관련 산림청과 행정자치부간의 협의안 반영
 - 원석시가 산정기준 변경 : 용도별로 기준하여 산정
- 개정된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의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내용 및 범위를 정함

충청북도 노사민정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 : 충청북도지사)

[제안이유]

- 충청북도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설치·운영 및 예산지원 근거 마련

[주요내용]

-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설치와 운영 주체, 사무국 직원임용 등 사무국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 하부협의체와 사무국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예산지원 근거 신설

충청북도진로교육원 설치 계획안(제출 : 충청북도교육감)

[제안이유]

- 진로교육 종합 지원체제를 구축하여 질 높은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소질과 적성을 바탕으로 진로를 설계할 수 있는 미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충청북도진로교육원 설립 필요

[주요내용]

- 명칭: 충청북도진로교육원
- 위치: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 180번길 3(구, 주성중학교)
- 시설 규모

면적		주요 시설
대지	건평	
27,720㎡	9024,11㎡	· 체험실 : 10개 체험마을(40직업체험) · 특강실, 세미나실, e-직업 체험실, 강당, 상담실, 도서실, 휴게실, 사무실, 식당

- 소요예산 : 9,459,808천원
- 이용대상 : 학생 및 교직원, 학부모
- 업무내용 : 충청북도 진로교육 지원

충청북도 과학기술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 : 충청북도지사)

[제안이유]

- 과학기술위원회의 기능을 기존 자문역할에서 심의·자문기능으로 확대하여 위원회 기능 재정립 및 운영활성화 도모

[주요내용]

- 조례명 변경 : 조례명 중 “지원”을 삭제하여 명료화
- 위원회 기능변경 : 자문 → 심의·자문 기능으로 확대
- 위원회 당연직 위원 직위 변경 : 업무중심 직위명으로 변경



충주시 의료사각지대 해소 · 집행부의 법준수 촉구



이 언 구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지난 6월 16일 충주시에서 발생한 인터넷 설 치기사 고 이상철씨 사망 이유는 충주시의 열 악한 의료환경 때문입니다.

고 이상철씨는 충주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해당 병원에 제대로 치료할 외과의 사와 의료시설이 없어 원주기독교병원으로 이송하던 중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22만명이 거주하는 충주시에 제대로 된 의료시설이 없어 이 런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난 것은 통탄할 일입니다.

다시는 이러한 비극적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충청북도는 충주의료원 시스템을 개선하고 충주시, 중앙정부와 협력을 통

해 충주지역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주 시기 바랍니다.

또한, 충청북도는 지난 회기에 총 1400억원이 소요되는 청 주전시관 건립과 관련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타당성 조사와 투자심사도 받지 않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규정도 모두 어기고 제 출한 것입니다.

그러나 충청북도는 모든 책임을 충청북도의회의 책임으로 전 가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지사는 사업추진 시 최우선적으로 법과 질서를 지키 고 주민의 대의기관인 충청북도의회의 의견을 존중 하는 협치 행정을 펼쳐 주시길 촉구합니다.

“자연재해 미리 대비하여 인재(人災)를 줄이자”



임 회 무 의원
(산업경제위원회)

본 의원은 자연재해를 근본적이고 효율적으 로 예방하기 위해 충청북도가 보다 선제적으 로 대응해 줄 것을 요청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올 봄 우리 국민들을 괴롭힌 첫 번째 자연재 해는 매년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가뭄’인데, 이번 가뭄은 전국 농민들과 상수도 시설을 제 대로 갖추지 못한 산골마을 주민들에게는 먹을 물조차 없는 고 통이었습니다.

현재 충청북도의 자연재해 대책은 가뭄이 오면 관정을 파고 폭설이 내리면 제설만 하는 형국인데 본 의원은 가뭄 발생, 홍

수 발생, 폭설 발생, 산사태 등이 발생한 이후에 대책을 수립하 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한마디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입니다.

결국 폭설 대책은 여름에, 가뭄 대책은 겨울에 미리 사전에 철 저히 조사하여 준비를 한다면 예산절감과 인력의 효율적 배치 도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자연재해 분야에 하천 기본계획만 수립 할 것이 아니라 가뭄기본계획도 수립해야 할 때입니다.

사전 예방대책을 미리 마련하지 않고 매년 가뭄에 시달린다 면 가뭄은 더 이상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人災)가 될 것이기 때 문입니다.

충청북도는 자연재해 대책에 가뭄도 포함시켜 선제적으로 대 응하는 현명한 정책을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수가(酬價) 현실화 촉구



이 광 희 의원
(정책복지위원회)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의 바우처 수가(酬價) 현실화에 대한 충북도의 대책마련을 촉구하 고자 이자리에 섰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은 신체적 · 정신적 장 애 등을 이유로 혼자서 생활하기 어려운 중 중장애인들에게 활동보조인 파견과 방문목 욕, 방문간호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이고자 2007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시 · 군에서는 장 애인활동지원기관을 지정하고, 제반비용은 사회서비스이용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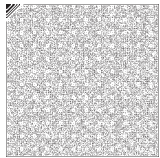
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에서는 「장애인활동 지 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적절한 활동지원급여 제공을 국 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운영 실태를 보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심각한 문제 를 안고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수가(酬價)는 2007년도 시작당시 최 저임금 기준으로 책정했지만 최저임금은 매년 7%정도씩 상승 한 반면 활동보조인 수가는 연 평균 2%대 상승에 그쳤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지사님께 강력히 요청 드립니다.

첫째, 잘못된 보건복지부의 수가 현실화를 위해 전국시 · 도 지사협의회를 통한 제안 등의 적극적인 노력입니다.

둘째, 충북도내 장애인활동보조인력 인건비 지급 현황 조사 와 충북도 차원의 대책마련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소멸 시대에 대비하자”



엄재창 의원
(산업경제위원회)

2014년 5월 일본의 창성회의에서 발표된 ‘마스다 보고서’에 의하면 일본의 1800여개 도시 중 약 50%인 896개 도시가 다가오는 2040년까지 소멸될지도 모른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작년에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마스다 보고서’의 분석기법을 그대로 적용하여 국내 지역별 소멸가능성을 예측한 ‘한국의 지방 소멸에 관한 7가지 분석’이라는 자료에 따르면 향후 30년 이내에 전국 78개 시·군 1,383개 읍·면·동이 소멸할 수 있는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특히 여기에 괴산군, 보은군, 단양군이

포함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농촌 군 지역에 인구소멸 방지를 위한 다음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며 도정의 역점시책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첫째, 농촌 청년 일자리 창출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여성이 출산 후, 일과 육아 병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영·유아 보육과 양육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군 단위 농촌지역의 교육여건을 대도시와 같은 수준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농촌지역의 보건의료 환경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농촌지역의 20대~30대 여성들의 전용 문화시설을 확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임대주택 입주민 삶의 질 향상 시책 적극 추진해야



장선배 의원
(건설소방위원회)

취약계층 도민들의 주거복지 향상 조례 제정에도 불구하고 조례의 집행을 계속 외면해 온 행정의 난맥상을 지적하고 적극적인 추진을 촉구합니다.

지난 2014년 12월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조례」는 기초생활수급자, 노인, 장애인 등 저소득계층이 70% 이상 거주하고 있는 영구임대주택 입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복지확대를 통해 건강한 생활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취지로 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초까지도 관계부서 간에 본 조례의 담당이 자신

들의 업무가 아니라고 서로 떠넘기며 세월을 보내다 조례제정 3년째인 지금 조례에 수립하도록 규정된 기본계획을 8월에 용역 발주하기로 최근 결정했습니다.

또한 관련 정책을 심의할 위원회 구성도 계속 미온적이다가 최근에서야 만들었으며 기본계획수립 용역도 위원회 논의 없이 발주한다고 하니 구색만 겨우 갖춘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되지 않을까 매우 우려됩니다.

하루 속히 영구임대주택 입주민들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을 적극 추진해 건강한 생활공동체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충북도정이 도민들로부터 전폭적인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부족한 부문을 철저하게 검토·보완해 주시고, 아울러, 영구임대주택 입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진천 스포츠테마타운 조기 조성·한국체대 이전 촉구



이양섭 의원
(정책복지위원회)

진천 스포츠테마타운의 조속한 조성과 한국체육대학교의 진천 이전을 위한 충청북도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합니다.

국가대표 진천 선수촌은 지난 2005년도 공사를 시작해 올해 9월이면 최종 준공됩니다.

그런데, 지난 2011년도 1단계 시설이 준공되고 정상 운영이 시작 됐음에도 도민과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거의 없어 기대감은 오히려 실망감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선수촌 인근에 스포츠 관련 기관 및 산업을 유치하는 것이 당면과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생각하며 지사님

께 두 가지 요청을 드립니다.

첫째, 선수촌 인근인 진천군 광혜원면 회죽리 일원에 조성 계획 중인 스포츠테마타운의 조기 조성을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체육회에서는 진천 선수촌을 생활체육동호인 등 국민에게 개방하고 훈련시설 견학과 체험코스를 개발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둘째, 충북도 차원에서 한국체육대학교의 진천 이전을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충북도가 앞장 서 한체대와 재논의 테이블을 만들어 주시고 대한체육회 및 지역 국회의원들과 협력하여 한체대가 진천 선수촌 인근으로 이전하여 상생발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의요구 제도의 부당성 및 개선 필요성 제기



임 병 운 의원
(산업경제위원회)

재의요구 자체에 대한 제도적 차원의 부당성과 개선의 필요성을 설명 드리고 그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107조에 규정된 지방의회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 제도는 대상범위, 성립요건, 이의제기 절차에 있어 이해하기 힘든 수준의 심각한 부당함을 내포하고 있으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재의요구의 대상은 별도의 특정한 범위가 아닌 지방의회 의결 전체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예산안, 조례 제·개정, 행정사무조사 요구 등 지방의회 의결 전체에 대해 행사가 가능합니다.

둘째, 재의요구를 행사할 수 있는 성립요건이 모호하고 자의적이라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재의요구 성립요건은 월권, 법령위반, 공익 저해 세 가지입니다.

본 의원은 현재의 재의요구 제도가 지방정부의 양대 축인 집행부와 지방의회 간의 견제·균형의 원리를 위해 설계된 것이 아닌, 중앙집권적 관치시절의 잔재에 불과한 청산대상 즉 폐임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와 같은 현행 재의요구 제도의 부당성들이 지방분권형 개헌 등 다양한 사회적 논의과정을 거쳐 시정되도록 노력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우리 모두에게 있음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의회 주요 용어 해설

임시회(臨時會) 지방의회는 항상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개최하고 그 기간동안에는 매일 본회의를 열 수 있다. 임시회는 재적의원 1/3 이상의 요구와 자치단체의 장 요구로 개최된다.

정례회(定例會) 매년 정례적으로 연2회 개최되는 회의를 말한다. 시·도의회는 매년 6, 7월과 11, 12월에 정례회를 개최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9, 10월중에 집회할 수 있다.

회기(會期) 의회는 언제나 활동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기간을 정하여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 기간을 「회기」라고 한다. 따라서 의회가 집회되면 반드시 활동기간 즉 회기를 결정해야 한다.

안건(案件) 「안건」이라 함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논의, 처리의 대상이 되는 모든 사안을 말하는데 앞에 설명한 의안과 기타 사안을 모두 포함한 개념이다. 안건중에는 의결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질문·연설·보고 등이 있다.

의안(議案) 지방의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많은 사항 즉, 안건중에서 특별한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여 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하는 것을 「의안」이라 한다.

대안(代案) 원안과 일반적으로 취지는 같으나 그 내용을 전면적으로 수정하거나 체계를 전혀 다르게 하여 원안에 대신할 만한 내용으로 발의하는 것을 말하는데 수정안의 일종이다.

계류(繫留) 의회의 심의·의결 대상으로서 제안된 안건이 처리되지 못하고 위원회나 본회의에서 논의 중이거나 논의할 대상으로 놓여있는 상태를 「계류」라고 한다.

제의(提議) 의장이 안을 낼 때에는 「제의」라 한다. 의회 관행상 간단한 사항은 의장이 안을 발의하여 본회의 의결을 얻기도 한다. 예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회기결정의건」도 의장제의를 가능하다.

제안(提案) 위원회가 안을 만들어 낼 때에는 「제안」이라고 하는데 제안은 발의와 제출을 포함한 개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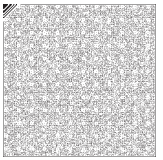
발의(發議)와 제출(提出) 의원이 제안을 낼 때에는 「발의」라고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안을 낼 때에는 「제출」이라 한다.

상정(上程) 「상정」이란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이나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서 당일 의사일정에 기재된 안건에 대해 「○○○을 상정합니다」 선포함으로써 비로소 당해 안건이 상정되었다고 한다.

회부(回附) 제출된 의안을 의장이 심사할 권한이 있는 소관위원회에 송부하는 행위를 말하며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에 심사토록 송부하는 행위도 회부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개원(開院)과 개원식(開院式) 새로 선출된 의원이 최초로 모여서 의장·부의장을 선출하고 그 지방의회가 첫 회의를 여는 것을 「개원」이라 하며, 총선 이후 최초로 집회되면 개회식을 갖게 되는데 이것을 「개원식」이라 한다.

정회(停會) 「정회」란 일단 개의된 회의를 진행하다가 회의를 중단하는 것으로서 법규정 사항으로는 일반적으로 안건에 대한 이견조정, 휴식, 질의(질문)에 대한 답변준비, 중식 또는 석식시간의 확보 등 필요한 경우에 정회한다.



개회(開會) 「개회」란 의회가 집회되어 활동을 시작하였다는 의미로 사용되며, 「제○회 ○○회의(임시회 또는 정례회)가 개회」되었다고 한다.

유회(流會) 예정된 당일 회의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 이상의 의원(의원)이 출석(의사정족수 충족)하여야 하나 개의 예정 시간으로부터 일정시간(1시간 정도)이 지나도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면 당일 회의를 열지 못하게 되는데 이 경우를 유회라 한다.

속개(續開) 「속개」란 중지된 회의를 다시 시작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경우에도 개의되는 때와 같이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어야 한다. 산회(散會)-산회는 개회나 개의의 반대의 개념으로 그날의 회의를 마치는 것, 즉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의 의사가 끝났을때 산회를 선포하는 것이다. 산회를 선포한 이후 당일에는 회의를 열 수 없게 된다.

폐회(閉會) 「폐회」란 개의의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의회의 활동기간 즉 회기가 종료되는 것을 말한다. 이는 회기가 끝나는 날 회의도 「산회」를 선포하게 되므로 폐회선포 없이 사실상 폐회되는 것이다.

휴회(休會) 「휴회」는 본회의에서만 사용되는 용어이다. 의회가 집회되어 본회의 의결로 회기가 결정되는데 그 회기중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본회의를 열지 않는 것을 휴회라 한다.

재개(再開) 「재개」는 본회의 휴회기간 중에 긴급한 안건의 처리 등 필요에 따라 휴회를 해제하고 본회의를 다시 여는 것을 말한다.

집회(集會) 「집회」란 의회가 활동을 시작하기 위해서 일정한 일시에 일정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한다. 지방의회가 집회하기 위해서 의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집회 요구가 있어야 한다.

동의(動議) 「동의」라 함은 회의체에서 의원(의원)이 통상적으로 안을 갖출 필요없이 의사결정을 위해 안을 맨 처음 제안하는 과정이 된다. 동의는 통상 구두로 발의하게 되고 동의자 외 1인 이상이 찬성하면 그 동의는 성립된다.

재청(再請) 일반적으로 동의는 발의하는 의원 이외에 1인 이상의 찬성으로 논의할 수 있는 대상, 즉 의제가 된다. 그런데 「재청」이란 발의된 동의에 대해서 찬성한다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심의(審議)와 심사(審査) 「심의」와 「심사」는 의회에서 안건을 결정하기 위해서 즉 의결하기 위해서 논의하는 것을 말한다. 심의는 본회의 논의단계를 말하고 심사는 위원회 논의단계를 말하는 것으로 구별한다.

가결(可決)과 부결(否決) 「가결」은 안건이 통과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부결」은 안건이 통과되지 아니하였다는 의미이다.

의결정족수(議決定足數) 「의결정족수」는 안건을 의결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출석의원 수를 말한다. 의결정족수는 지방자치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있다.

의사정족수(議事定足數) 「의사정족수」는 본회의나 위원회 회의를 개의 또는

개회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의원수를 말한다. 본회의와 위원회 모두 재적의원(의원)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의(개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과반수(過半數) 과반수는 의사결정의 방법으로 다수결의 한 형태이다. 과반수는 구체적으로 반수를 넘는 수로서 2분의 1이상과는 다른 개념이다. 예를 들어 9명에 대한 과반수는 5명이고 10명에 대한 과반수는 6명이다.

위원(委員) 「위원」이라 함은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그리고 소위원회의 구성원인 의원을 가르키는 말이다. 다같이 의원이라도 본회의의 구성원일 경우에는 의원이라 하고 위원회의 구성원일 때에는 위원이라 부른다.

의사봉 삼타 의사봉을 삼타하는 이유는 의사 진행시 각 단계마다 명확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서 선진 외국 의회 민주주의의 관습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의사봉 삼타는 주로 개의·산회 선포시, 정회·속개 선포시, 의사일정 상정시, 질의·토론종결 선포시, 표결 선포시, 의결내용 선포시 등이다.

재의요구(再議要求) 지방의회가 의결하여 자치단체의 장에게 보낸 조례안이나 예산안 등이 법령에 위반되고 있거나, 지출할 수 없는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 등 자치단체의 장이 이를 다시 심의해 달라고 의회에 돌려보내는 것을 말한다.

공포(公布) 새로이 제정 또는 개정된 법령(조례)을 도민에게 주지시키는 행위 또는 그 절차를 의미한다. 법령은 공포하여야 시행할 수 있다.

건의안(建議案) 건의안은 지방의회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기타 공공기관 등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일정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구 또는 희망하기 위해 제출하는 의안을 말한다.

결의안(決議案) 지방의회의 공식적인 의견을 대·내외적으로 나타내기 위한 의안의 일종이다. 일반적으로 쌀수입개방저지결의안 등과 같이 의견을 외부에 나타내기 위한 것이 있다.

개의(開議) 「개의」란 회기중에 당일의 본회의를 여는 것을 말하는데 「개회」는 전체적인 회기가 시작됨을 강조하여 사용된다.

경호권 회기중 의회안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의장이 행사할 수 있는 내부 경찰권이다. 경호권은 의장만 행사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필요시에 의장에게 경호권 발동을 요청할 수 있다고 본다.

공전(空轉) 의사일정은 작성되었으나 의사정족수 미달로 회의를 못하는 경우는 유회, 의사일정도 정하지 못하고 회의를 하지 못하는 경우를 공전이라 한다.

공청회(公聽會) 위원회가 중요한 안건이나 전문지식이 필요한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이나 직접 안건과 관련이 있는 주민들로부터 의견을 듣기 위한 회의이다.

기관위임사무(機關委任事務) 국가 또는 상급 자치단체인 시·도가 처리해야 할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서울특별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처리하도록 위임한 것을 말한다.



충청북도의회 김양희 의장과 도의원들이 8월 15일 '제72주년 광복절 경축행사'에 참석해 순국선열들의 송고한 나라사랑을 되새기며 호국영령들의 넋을 기렸다.



정책복지위원회는 7월 11일 오후 설립된 '충북여성재단'과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인 '청주 해오름마을'을 방문해 운영현황을 청취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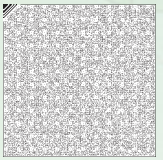
산업경제위원회는 7월 19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경제통상국, 농정국, 충북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상황을 보고 받았다.



건설소방위원회는 7월 12일 2017제천국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 개최를 70여일 앞두고 있는 엑스포 현장을 방문해 추진상황을 듣고 현장을 점검했다.



충청북도의회 김양희 의장과 도의원들이 7월 31일 청주 상당공원에서 실시된 '제5회 충북여성재단 대장정 발대식'에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충청북도의회는 7월 25일과 8월 9일 도의원과 사무처 직원들이 성금한 수재의 연금과 전국 시·도회의의장협의회가 마련한 수재의연금을 (사)전국재해구호협회와 이시종 도지사에게 각각 전달했다.



충청북도의회는 8월 16일 의장실에서 역대 의장들을 초청해 의정발전과 도정 발전을 위한 고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경기도의회 정기열 의장과 경기도의회 사무처 직원들이 7월 20일 충북도의회를 방문해 김양희 의장에게 수해복구 성금을 전달하고 청주시 오송읍 일원에서 충청북도의회와 함께 수해복구 작업을 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충북지회

충청북도의회는 7월 18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충북지회' 회원 60여명을 초청해 지방자치의 운영방식과 회의진행 절차, 도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체험하는 '충청북도의회 의정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충청북도의회는 7월 7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청주여자고등학교 정치토론 동아리' 학생 20여명을 초청해 도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설명하고 본회의장을 안내하는 등 '의정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상속과 관련된 법·률·상·식

상속세는 민법 중 상속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으므로 상속세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민법 규정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 상속순위

유언으로 상속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유언상속이 우선하며,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에서 정한 순위에 따른다.

- 민법상 상속순위는 다음과 같다.

순 위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인 해당 여부
1순위	직계비속과 배우자	항상 상속인이 된다
2순위	직계존속과 배우자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 상속인이 된다
3순위	형제자매	1,2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된다
4순위	4촌이내의 방계혈통	1,2,3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된다

- 법적상속인을 결정함에 있어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에는 촌수가 가장 가까운 상속인을 우선 순위로 하며, 촌수가 같은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예를 들어 직계비속으로 자녀 2인과 손자녀 2인이 있는 경우에는 자녀 2인이 공동상속인이 되고 손자녀는 법정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 상속순위를 결정할 때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 상속지분

피상속인은 유언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지절할 수 있으며(지정상속), 유언으로 상속지분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법에 규정된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한다.

Guide 배우자의 상속순위

배우자는 1순위인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며,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2순위인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된다.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

Guide 법적상속분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에는 상속분이 동일한 것으로 하며,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한다.

구분	상속인	상속분	비율
자녀 및 배우자가 있는 경우	장남과 배우자만 있는 경우	장남 1 배우자 1.5	2/5 3/5
	장남, 장녀(미혼), 배우자만 있는 경우	장남 1 장녀 1 배우자 1.5	2/7 2/7 3/7
	장남, 장녀(출가), 차남, 차녀, 배우자만 있는 경우	장남 1 장녀 1 차남 1 차녀 1 배우자 1.5	2/11 2/11 2/11 2/11 3/11
자녀는 없고 배우자와 직계존속만 있는 경우	부모와 배우자만 있는 경우	부 1 모 1 배우자 1.5	2/7 2/7 3/7

Guide 유류분(遺留分)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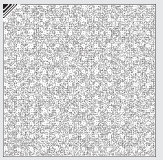
유언에 의하여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의사가 지나치게 감정에 치우치게 되면 여러 사람의 상속인 중 한 사람에게만 재산을 상속하거나 타인에게 전 재산을 유증(유언에 의한 재산증여)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민법에서는 각 상속인이 최소한도로 받을 수 있는 상속분을 법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상속권이 있는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과 같다.

- 피상속인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 : 법적상속분의 1/2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 법적상속분의 1/3

(자료제공 : 동청주세무서) 세금절약 가이드발행



소화장애 몸의 경고를 놓치지 말라

▣ 흔하다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면 위험

소화장애 증상의 원인은 대부분 기능성소화불량증이며, 일부에서 소화성궤양·위장관 종양·위식도역류 질환·간질환·췌담도 질환 등이 원인이 되기도 한다.

기능성소화불량증은 위십이지장 운동성 장애, 내장 과민성·위산·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식이요인·심리적 요인 등의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다.

여러가지 원인 중에서 환자별로 정확한 원인들을 찾아야 제대로 소화장애에 대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대부분의 경우 증상만으로 원인을 밝혀내는 것이 쉽지 않다.

따라서 자가로 소화장애의 원인을 짐작해 전문적인 진료 없이 방치하는 것은 위험하다.

▣ 상복부통증·식후불편감증후군으로 나뉘어

소화장애의 증상은 상복부 또는 명치 위치에 통증·작열감·식후 포만감·조기 포만감 등의 형태로 분류할 수 있다.

이를 기능성소화불량증의 측면에서는 ‘상복부통증증후군’과 ‘식후불편감증후군’으로 크게 나눈다.

많은 경우 환자들이 ‘소화가 안 된다’, 또는 ‘배가 불편하다’ 등으로 모호하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진료하는 의사들은 좀 더 명확하게 증상을 청취해 정확한 양상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같은 소화장애라 하더라도 이러한 양상에 따라 증상 유발 원인이 다르기 때문이다.

상복부통증증후군은 위장관 운동기능 장애가, 식후 불편감증후군은 위산에 의한 자극이 증상이 발생하게 한 원인으로 추정된다.

또한 다른 증상이 동반되는지 확인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러한 동반 증상들에 따라 원인에 대한 진단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특히 만성소화불량이 있는 환자들에게는 ‘경고증상’이 있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된다.

▣ 체중 감소·구토·출혈 등 ‘경고증상’ 놓치지 말자

경고증상은 쉽게 말해 환자의 증상이 단순한 기능성 소화 불량증이 아닌 다른 기질적인 원인 질환이 있을 가능성을 ‘경고’하는 증상을 말한다.

대표적인 경고증상으로 자기 체중 5~10% 이상의 체중감소, 진행성 또는 40세 이상에서의 최초 연하곤란(삼킴장애), 재발성 또는 지속성 구토, 출혈 증상(흑색변, 토혈, 혈변 등), 빈혈, 발열, 위암 가족력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소견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상부위장관내시경 검사를 시행해 원인 질환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필요에 따라서는 영상 검사, 혈액 검사 등을 하여 다른 원인질환들이 있는지 가능성을 파악한다.

경고증상이 없을 때는 적절한 약물치료를 약 4주간 시행해 보고, 반응이 없으면 우리나라에서 유병률이 높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검사를 시행해 양성인 경우 제균 치료를 추천하고 있다.

일정 기간의 약물치료에도 증상의 호전이 없을 때에는 반드시 상부위장관내시경과 영상 검사 등의 추가적인 평가를 해야 한다.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는 없으나 적절한 시기에 증상을 조절하고 평가를 진행하는 것이 소화장애에 대처하는 최적의 방법이라 할 수 있겠다.



〈자료제공 : 한국건강관리협회 충북세종지부〉



임 순 목 의원
(건설소방위원회)

긴급자동차에 길을 터주는 ‘모세의 기적’을 보면서...

얼마 전 병원에 가던 신생아가 ‘모세의 기적’ 덕분에 적절한 응급조치를 받을 수 있었다는 뉴스를 접했다.

경남 양산에서 태어난 신생아가 두상이 붓는 증상으로 부산의 대형병원으로 향하다가 차량 정체를 만났다. 퇴근시간이라 터널이 차량으로 꽉 차 있었지만 사이렌을 울리는 경찰차에 약속이라도 한 듯 양 옆으로 길을 터줘 10분 만에 응급실에 도착해 처치를 받을 수 있었다고 한다.

만약 정체된 차량이 길을 비켜주지 않아 터널 안에서 시간이 지체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골든타임을 놓쳐 장애가 발생하거나 목숨을 잃을 수 있었다고 생각하니 아찔하지 않을 수 없다.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등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긴급자동차의 우선통행을 규정하여 소방차, 구급차 등이 긴급업무를 신속하게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긴급 자동차 출동 시 우선 통행할 수 있도록 진로를 양보하지 않아 단속된 건수가 2013년 12건에서 2014년 49건으로 4배 가까이 증가하는 등 긴급 자동차에 대한 양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소방차나 구급차 등 긴급자동차는 응급 환자의 이송, 화재 진압 등 긴급한 상황에서 운행이 되기 때문에 현장에서의 단속도 어렵다.

긴급자동차의 우선통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소방차나 구급차의 긴급한 상황 출동 시에 교통신호를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신호 교차로의 차량과 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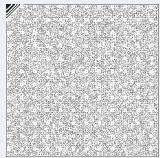
행자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인접 교차로의 지체를 예방하거나, 과태료 인상 및 처벌규정 강화 등의 방법이 있을 것이다.

충청북도에서는 지난 4월부터 전국에서 최초로 「긴급차량 우선 교통신호시스템」을 시범운영하고 있다. 「긴급차량 우선 교통신호시스템」은 재난 현장 도로를 교통상황 CCTV영상을 통해 교통정체, 차량 통행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출동방향의 교통신호가 연동되도록 조작하는 것으로 골든타임 내에 재난 현장에 도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실제 시범운영 기간 동안 평균 출동시간이 2분 50초 가량 단축되고 소방차량 교통사고도 전년도 동기간 대비 8건(47%)감소하는 등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 긴급자동차 양보 의무를 위반해 긴급자동차의 통행을 방해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도록 해 처벌을 상향시키는 법 개정도 추진된다고 한다.

이렇듯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 개선이나 법적인 강제성을 부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효과적인 것은 긴급 자동차의 진로확보를 위한 양보가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하는 성숙된 시민의식이라고 생각한다. 긴급자동차 길 터주기는 타인의 작은 배려가 아닌 우리 모두의 의무라는 사회적 공감대 확산이 필요하다. 백양터널의 신생아가 겪은 모세의 기적이 언제든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당연한 일이 되었으면 한다.



7월의 수해가 우리에게 남긴 것들...



이 숙 애 의원
(교육 위원 회)

7월 16일 충북에 내린 집중호우는 막대한 피해와 상처 외에도 몇 가지 교훈을 남기고 지나갔다.

그동안의 경험상 시간당 91mm의 집중 호우에도 이정도로 심각한 피해는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언론과 SNS의 소식을 통해 위기 상황을 어느 정도 직감할 때는 이미 늦었고, 견잡을 수 없는 수해 소식에도 민들은 패닉상태에 빠져버렸다.

영원히 그칠 것 같지 않던 비가 그친 뒤에는 일찍이 겪어보지 않은 피해에 당황하고 우왕좌왕 하던 것도 잠시일 뿐, 행정기관 및 이·통장들과 직능단체 회원 등도민들, 군부대 장병들, 전국에서 몰려든 자원봉사자들이 합심하여 복구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1개월여가 지난 지금은 겉으로 보기에 어느 정도 극복된 듯하다.

그러나 수해로 인한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과 수재민들의 상처를 극복하기엔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우선 이번 충북의 수해는 자연재해에 대한 예방과 대책을 철저하게 세워야한다는 상식적인 교훈을 각인시켜 주었다. 청주지역은 자연재해로부터 안전지대라 자부했던 지역이다.

그러나 시민들은 이번 수해를 겪으면서 그동안의 생각이 얼마나 오만한 생각이었는지를 처절하게 깨달았다. 행정기관의 체계적인 시스템 부재를 지적하지만 우리들 스스로도 청주는 안전한 지역이라 자부하며 안일한 태도로 일관해 왔다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결국 이번 수해는 자연재해가 특정 지역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므로, 아주 기본적인고도 상식적인 수준의 준비는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경고를 준 것이다.

둘째, 자원봉사자들의 저력은 역시나 대단했다. 수해복구 기간은 한여름 중 가장 무더웠던 시기로 기온과 습도가 최고조에 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자원봉사자들은 땀과 흙이 범벅된 모습으로 토사와 쓰레기를 걷어내고, 온갖 고된일을 다하면서도, 기꺼이 서로를 챙기며, 이웃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감동적인 드라마를 연출했다.

이 나라가 아직은 살 만한 나라임을 국민들이 몸소 보여준 것이다.

셋째, 존재감을 확실하게 보여준 수호천사는 증평의 37사단과 주변 지역 군부대 장병, 경찰들이었다.

모든 수해복구 현장에 어김없이 나타난 장병들은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현장의 위험한 작업들을 묵묵히 해냄으로써 수해복구 현장의 감초 역할을 했다.

평소에 무관심하게 지나치던 군부대 울타리 안의 옛된 귀공자들이 우리의 곁에 수호천사로 존재하고 있음을 확실하게 보여준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민들이 의원들에게 보낸 강력한 메시지다. 수해 중 해외 연수로 인한 충북도의회에 대한 파가운 질책은 31명의 충북도의원들에게 ‘국민들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알고 명령을 받들라’는 강력한 메시지로 전달되었다. 이렇듯 이번 충북의 수해는 우리들에게 강력한 경고와 교훈을 남기고 지나갔다.

“충북도의회는 **항상** 열려있습니다”

청원안내

■ 청원서 제출방법

- 도의회에 청원을 하려면 도의원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 제출
- 청원서에는 청원인 주소·성명(기재, 서명(날인))
- 청원서에는 청원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음
- 청원서에는 소개하는 의원의 청원 소개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청원서 문의 · 의사담당관실 : 043)220-5151~5155

민원안내

■ 진정서 등 제출

- 진정서는 청원서 외에 진정서, 건의서, 탄원서, 문의서, 호소문, 인터넷 민원 등 특정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함
- 진정서는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고 진정내용을 정확히 기재하여 제출

■ 제출방법

- 우 편 : 28515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 의사담당관실
- 인터넷 : <http://council.chungbuk.kr>의 「진정/민원」에 글쓰기
- 팩 스 : 043) 220-5159

방청안내

■ 방청권 교부

- 의회사무처에서 교부받은 방청권에 주소, 성명, 직업 및 연령 등을 기재하여 신청
- 방청시 방청인이 지켜야 할 사항 준수

■ 방청권 신청 · 의사담당관실 : 043) 220-5155



충청북도의회

<http://council.chungbuk.kr>

- 충청북도의회 인터넷방송 : <http://tv.council.chungbuk.kr>
- 트위터 : <http://twitter.com/#!/chungbuk/assem>
- 페이스북 : <http://www.facebook.com/cbassembly>